

산업부, 기업의 인증부담 줄인다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2. 9. 13.)

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하기 위한 인증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「인증제도 개선방안」을 발표하였다.

-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,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.
-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, 산업부 소관 「인증제도 개선방안」을 발표하고,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
-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,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·중복 인증, 과도한 인증 취득·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.
-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·중복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*을 마련하였으나, 업계는 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건의
- * 「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」(‘14.8월), 「인증규제 혁신방안」(‘15.11월) 등
-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,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「인증제도 개선방안」을 수립하였다.
- 간담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① 품질·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재심사·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
- ②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, KC안전인증(전기용품, 생활용품, 어린이제품)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감면(‘22.10~’23.3)*
- * 현장(공장)심사 수수료 20% 경감, 접수(발급) 비용 면제
- ③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하여 인증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
- ④ 한 제품임에도 다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'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'를 강화
- ⑤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(유럽CE, 美UL)의 국내취득을 위한 국내인증기관과 해외인증기관간 업무협약(MoU) 확대 및 국내인증기관 해외 진출 지원
- ⑥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·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